

EU Brief

| EU 동향 |

- 한-EU FTA 잠정발효 1주년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Korea-EU FTA
- 유로존 재정통합 추진 논의의 배경
The EU Fiscal Integration: Background and the current debate
- 2012년 프랑스 대선과 유럽통합
The 2012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 한-EU FTA 발효 이후 對EU 교역 및 투자 평가
Korea-EU FTA: An Assessment of Trade and Investment in the EU
- EU의 재정긴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
EU Austerity and the Future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ies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 Focus

한-EU FTA 잠정발효 1주년	002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Korea-EU FTA	



EU Economy

유로존 재정통합 추진 논의의 배경	004
The EU Fiscal Integration: Background and the current debate	



EU Politics

2012년 프랑스 대선과 유럽통합	008
The 2012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Trade & Investment

한-EU FTA 발효 이후 對EU 교역 및 투자 평가	013
Korea-EU FTA: An Assessment of Trade and Investment in the EU	



Industry Trends

EU의 재정긴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	017
EU Austerity and the Future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ies	



EU Law

EU의 환경보호 관련 법체계	022
EU Environmental Policy	



Social Issues

유럽연합(EU)의 언어	026
Languages in the European Union	



Report Review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유로존의 재정위기	031
Japan's Lost Decade and Eurozone Crisis	



EU Centre news

제3회 EU Survey	033
The 3rd EU Survey	
35회 EU 특별강연	035
The 35th EU Special Lecture	
38회 EU 특별강연	035
The 38th EU Special Lecture	
39회 EU 특별강연	036
The 39th EU Special Lecture	
15회 EU Core-Circle 세미나	036
The 15th EU Core-Circle Seminar	



한-EU FTA 잠정발효 1주년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Korea-EU FTA

Korea had the lowest number of the free trade agreements before the 2000s. However, Korea is now the only Asian country that entered into the agreement with the EU and became a trade hub of the East Asian countries. The reason that Korea can be called the hub is that the proportion of its trade with the FTA countries out of the total trade increased from 0% to 35.3%, and that it will be over 80% with the concluded FTAs and those currently under negotiation.

Korea's FTAs are regarded as the 21st standard which is comprehensive and high level. Among all the agreements Korea made, the Korea-EU FTA is evaluated as an ideal model. As the EU also assesses the Korea-EU FTA as a 'New Generation FTA,' it utilises the previous experience as the role model for the negotiation with each country among ASEAN, India, and Japan.

The Korea-EU FTA that became effective in July 2011 made Korea have both expectations and concerns as it was the first FTA with an enormous advanced economy. As of the first anniversary since effective, the vague concerns regarding the Korea-EU FTA are converted into tangible achievements and expectations.

For six months since effective, the trade between Korea and the EU increased by 3.9%, amounting to 49.5 billion dollars. It is noticeable, considering the negative impacts of Europe's fiscal crisis on the world trades. Especially, products with preferential tariff benefits led Korea's exports to the EU. Automobile exports the typical preferential tariff benefit product, increased by 93.1% in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proving the benefits of the Korea-EU FTA. It was also confirmed in

chemical products, automobile parts, tires, and plastic resins. Narrowing down the imports by the EU to the products with the preferential tariff benefits, the imports from Korea increased by 14.8% while 2.6% from Japan and 0.5% from China. Based on this fact, it is confirmed that the Korea-EU FTA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the exports of Korea to the EU. According to survey conducted on May 2012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63.5% of Korea's corporations believed that the external economic environment is worsening, and 68.8% believed that the Korea-EU FTA will strengthen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In other words, Korea corporations are feeling the strong effects of the exports through the FTA.

Usefulness is also confirmed in investments. For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compared to the same period of the prior year, investments from the EU to Korea increased by 66.8%, amounting to 2.98 billion dollars. The trade opportunity generated by the Korea-EU FTA and Korea's advancement attracted foreign investments.

To maximise the effects of the Korea-EU FTA,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significant efforts to carry out the agreement. Th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utilising the organisations such as the 'Korea-EU trade committee' held in October 2011, six special committees, seven working groups, and a cultural cooperation committee, improving the practical use for the corporations, and endeavoring to directly benefit the people in diverse ways. It will also pursue the compensation plan. ★

한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FTA 체결에 있어 최후진국이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자, 동아시아 FTA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은 21세기형 FTA의 표준으로 간주될 수 있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한-EU FTA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의 모델로서 평가된다. EU는 한-EU FTA를 'New Generation FTA'로 평가하며, 현재 EU가 추진 중인 인도, 일본 등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FTA 협상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는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첫 번째 FTA로서, 발효 당시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한-EU FTA에 대한 막연한 우려는 발효 1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구체화된 성과와 기대로 전환되고 있다.

한-EU FTA 발효 후 6개월 동안 한-EU 간 교역은 3.9% 증가한 495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1년 하반기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하다. 특히, 2011년 하반기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 품목들의 수출이 한국의 EU 수출을 주도하였다. 대표적인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2011년 하반기 EU로의 수출이 93.1% 증가하는 등 한-EU FTA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는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제품의 대EU 수출이 급증한 데서도 확인된다. 비슷한 시기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 품목을 대상으로 EU의 국가별 수입증가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대EU 수출 증가율이 14.8%인 데 반해 일본은 2.6%, 중국은 0.5%를 기록한 것을 보더라도 한-EU FTA가 한국

의 대EU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2012년 5월 실시된 대한상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63.6%가 대외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8.8%의 기업은 한-EU FTA가 수출을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고 답했다. 즉, 기업 현장에서도 한-EU FTA의 수출 지탱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는 평가다. 투자 측면에서도 한-EU FTA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1년 하반기 EU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66.8%나 증가한 29.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EU FTA를 통해 창출된 교역 기회와 한국 경제구조의 선진화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한-EU FTA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1년 10월에 개최된 장관급 '한-EU 무역위원회'를 비롯하여, 6개의 전문위원회 및 7개의 작업반과 별도의 문화협력위원회 등 협정상 이행 기구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FTA 활용률을 제고하고, FTA로 인한 혜택을 국민들이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고 있다. 또한, FTA를 통해 피해를 보는 한국 산업에 대해 정부가 약속한 보완대책도 충실히 시행해나갈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듯이, 이제는 한-EU FTA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주력할 때다. 한-EU FTA로 인한 이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EU FTA를 최대한 활용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유로존 재정통합 추진 논의의 배경

The EU Fiscal Integration: Background and the current debate

As the fiscal crisis continues to worsen, the response of the Euro zone is becoming more proactive. The most controversial debate is on Euro bonds. Nation's separate action is currently not enough to resolve the crisis. The financial market does not see the Euro zone as one economic entity and the mood of fear from the crisis continues to spread out to other vulnerable countries. After settling down by bailouts or injection of liquidity, the fiscal crisis in one country spread to other vulnerable countries. As we look back on the history of the European integration, Europe had an integration-related crisis every 10-15 years. European leaders established policies that would take Europe toward a closer union after each crisis. To resolve the current crisis, European countries need to regard themselves as one entity.

유로본드 등 재정통합 추진 움직임

2010년 초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시작된 유럽재정위기는 봉합과 재현을 거듭하면서 확대되어왔다. 지난 5월 6일에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는 반(反)긴축과 모라토리움을 주장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2위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조심스럽게 거론되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스뿐만 아니라 일부 재정 취약국에서도 банкр런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재정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유로존의 대응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로존 회원국의 공동 국채, 일명 유로본드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대표적인 예다.

유로본드는 재정통합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2011년 중반까지도 유럽 정치권에서 터부시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5월 프랑스 대선을 전후로는 독·불 정상회담의 공식의제로 채택될 만큼 유로존이 유로본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논의 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사실 재정부문은 가장 민감한 주권영역이며, 이에 대한 통합은 형태가 어떻든 상당한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조치이므로 섣뜻 추진하기에 부담이 되는 선택임은 분명하다.

재정위기는 개별책임인가, 공동책임인가

재정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향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대

표적인 두 관점으로는 개별책임론과 공동책임론을 들 수 있다.

개별책임론은 재정위기의 원인이 개별국가의 정책에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사실 재정부문은 각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EU는 통화공동체 출범 이전인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에서부터 이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EU 기능조약 125조는 “EU 공동체는 회원국 정부, 지자체, 공공조직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일명 지급불능조항(no bail-out clause)이라고 명명된 본 규정은 재정정책이 개별회원국의 소관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EU와 유로존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조항의 취지에서 볼 때 오늘날 유로존 국가가 재정위기에 봉착한 원인은 방만한 재정운용에 있다. 따라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긴축과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민간채권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개별책임론의 요지다.

재정위기의 원인이 방만한 재정지출에 기인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나, 무분별한 재정지출 만으로는 위기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과도한 재정지출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균형재정 또는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바, 과도한 재정지출을 이들 국가의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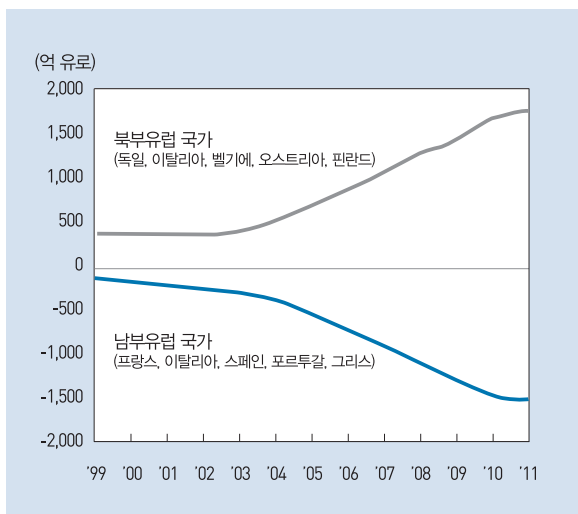
★ 유로존 회원국의 경상수지

(단위: GDP 대비비중, %)

		1994~98	1999~2007	2008	2009	2010
유로존		1.1	0.4	-0.7	-0.1	0.1
경상수지 적자국	그리스	-2.3	-8.0	-17.9	-14.3	-12.3
	포르투갈	-4.3	-8.8	-17.9	-14.3	-12.3
	스페인	-0.7	-5.5	-9.6	-5.1	-4.5
경상수지 흑자국	독일	-0.8	2.9	6.2	5.8	5.8
	네덜란드	5.2	5.0	4.7	2.9	5.1
	오스트리아	-2.2	1.1	4.9	3.0	3.2

주: 역내, 역외 포함
자료: Eurostat.

★ 유로존 국가의 대외순채권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Eurostat, NATIXIS.

기 원인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정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유로존 회원국 간의 산업특화가 이루어지고, 수출경쟁력 격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정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유로존의 무역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역내 회원국 간에는 매우 비대칭적인 패턴이 지속되어 왔다. 제조업이 강한 독일은 매년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데 반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은 매년 GDP의 10%에 전후한 막대한 무역수

지 적자를 겪어왔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과도할 때 이에 대한 가장 빠른 교정방법은 화폐의 평가절하다.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을 경우, 대체로 자동적인 환율조정이 이루어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폭은 과도하게 커지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환율 변동을 통해 외부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조정(external devaluation)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단일통화를 채택할 경우에는 이러한 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임금 삭감 및 생산성 증가를 통한 내부적 조정(internal devaluation)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 조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개별경제 주체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쉬운 선택이 아니므로 경상수지 적자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와 이로 인한 채무 증가에는 적자국뿐만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동책임론의 주장이다. 만약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국의 부(富)가 적자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면 경상수지 격차의 부작용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다.¹⁾

재정위기 해법, 긴축인가 성장인가?

재정위기 초기부터 재정건전성 확보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어 왔다. 재정위기의 원인으로서는 각국이 재정준칙인 「성장·안정협약(SGP)」을 준수하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자성으로 위기해결 과정에서 유로존 회원국은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¹⁾ 물론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흑자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임은 자명하다. Deo et al.(2011)은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를 감안할 때 유로화 이전의 화폐로 복귀할 경우 흑자국(독일)의 화폐(마르크화)는 40% 정도 절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독일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성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유로화 도입의 최대 수요자는 결국 독일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며, 독일 비즈니스계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Deo, S., Donovan, P.& Hatheway, L. (2011. 9. 6.). Euro break-up ? - the consequences, UBS Investment Research.)



요하며, 이를 위해서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 비전에 따른 정치적 합의가 절실

유로존은 출범 당시부터 학계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당시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는 유로존은 최적통화지대(OCA)의 성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²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에도 큰 변화가 없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로존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재정통합의 해결책은 독일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정 위기에 관한 독일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없이 재정통합(fiscal union)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정부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

한 재정지원을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경제개혁 요구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독일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 관철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통합 조치는 유로존 각국에서 재정규율이 확립되는 것을 전제로 서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데에는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 외에도 리더십 결여에 따른 정치적 합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향후 위기해결에는 회원국 간의 빠른 합의가 필수적이며 유로존의 통합성에 대해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² 영미계 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OCA 이론은 단일통화 사용의 조건으로 임금의 신축성, 노동이동성, 경제구조의 동질성, 재정 이전의 가능성 등 비대칭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행을 활성화하거나 금융거래세 도입을 통해 EU 자체 재원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이는 재정통합의 초기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위기 때마다 유럽통합 정책을 강화

재정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현재의 위기는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우선 한 국가의 재정위기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유로존 전체에 전이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2012년 1월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데에는 이탈리아에 대한 높은 익스포저가 크게 작용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유로존의 은행동맹(banking union) 논의는 한 국가의 은행위기가 유로존 전체의 체계적 은행위기(systemic banking crisis)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시장은 유로존을 더 이상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지 않는다. 재정위기는 유로존의 취약국가들을 타고 계속해서 전이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재정위기가 구제금융 또는 유동성 강화 조치를 통해 해결되면, 잠시 후 다른 취약국가로 이전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유로존의 가장 취약한 고리(weakest link)가 공격을 받는 이와 같은 현상은 시장이 유로존의 통합성(integrity)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아 더 이상 단일경제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U가 추구해온 경제통화공동체(EMU)의 불완전성이 계속적으로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역사를 살펴보면 10~15년을 주기로 통합과 관련된 위기가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위기는 정치·경제적 역학관계의 변화를 통합체로서의 제도가 수용하지 못해 한계가 노정됨으로써 촉발되었다. 그런데 위기 때마다 유럽 국가들은 통합을 한층 심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 1970년대 유럽통화제도의 탄생과 1980년대 EU 단일시장 추진, 1990년대 유로화 도입, 2000년대 중·동구유럽으로의 확대가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동체로서의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조치가 필

긴축 중심의 재정건전화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에 합의한 「신재정협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신재정협약」은 재정적자의 상한선을 명시함과 동시에 이를 헌법에 준하는 각국의 국내법으로 법제화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적 재제조치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2012년부터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들도 강도 높은 긴축재정에 돌입하면서 범유럽적 긴축기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더블딥에 빠지는 국가가 속출하면서 현 시점에서 긴축이 적절한 정책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특히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유세과정에서부터 성장을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독일 메르켈 총리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재정건전성 확보는 성공적인 국제발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국제발행 금리가 상승하여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기 쉽다. 또한 국제금리 상승은 민간금리를 상승시켜 기업의 투자여건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긴축은 정부지출의 감소를 유발해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난다.

현재 재정취약국의 실업률은 최고조에 달해 있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입을 늘려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고 국가채무 수준(GDP 대비)을 낮추기 위해서도 성장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기 힘든 실정이며, 유로존 회원국은 ‘긴축과 성장’이라는 양립이 어려운 과제에 앞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십시일반으로 EU 공동체의 예산을 확대하고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성장효과를 거두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공동의 합의를 통해 EU 예산을 늘리거나 EU 공동체에 일정 수준의 과세권을 부여할 경우, 금융시장의 불신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지출을 늘려 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개발은행(EIB)이 자본금을 늘려 프로젝트 본드 발



2012년 프랑스 대선과 유럽통합¹

The 2012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Si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France,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has been fluctuating. The reason is that the economic outlook of the Euro zone became uncertain as the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Germany and France has begun to weaken. Many EU members speak out that the austerity measures are insufficient to solve this crisis but rather they need a growth strategy to escape the economic recession. According to a recent research on the role of Franco-German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the situation that demonstrates both countries' strong leadership was when all of EU members came to an agreement after Germany and France found a point of compromise reflecting the opinions backed by other members. In the case of the fiscal crisis, the voice of EU members is clearly divided into two sides, represented by Germany and France. Therefore, the current situation is an opportunity for both countries to be accepted as mutual leaders with the justified agreement if both can seek a political compromise.

프랑스 대선이 유로존 재정위기의 향방을 결정

2012년 프랑스 대선은 어느 때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대선 결과에 따라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재정 위기의 해법에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 때문이었다. 사회당의 올랑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른바 '메르코지' 연합이 추진해온 긴축과 재정건전화 우선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성장 위주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했다.

5월에 치러진 대선은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로서 프랑스 사회당은 1995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물러난 지 17년 만에 정권을 되찾게 되었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됐다.

프랑스 대선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했던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 구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유로존 경제의 앞날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새 대통령 올랑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부터 줄곧 기존의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긴축보다는 성장 지향적인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올랑드 대통령 취임이 유럽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에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프랑스와 독일 간의 역학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올랑드 대통령 취임 후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긴축 일변도에서 벗어나 성장에 초점을 맞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 양자 관계에 있어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재정위기 대응 과정을 주도한 것은 독일이었는 데, 올랑드 대통령 취임 이후 프랑스가 이에 도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법 모색에서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대선과 재정위기 해법 논쟁

이번 프랑스 대선 이후에 나타난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유로존 재정위기 대응방식의 수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메르코지 연합이 상황을 주도하던 구도에서는 긴축과 재정 건전화의 최대 화두였고 최고의 미덕이었다. 그러나 올랑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구도에 변화가 가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EU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일각에서는 긴축만으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성장을 통한 경제 회생을 도모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치열한 대결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 쟁점은 바로 유로본드 도입 여부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빠르고 확실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로본드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지만 독일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유로본드를 도입할 경우 그 이자율은 신용도가 높은 재정우량국가들과 신용도가 낮은 재정불량국가들의 이자율 중간 정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독일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유로본드의 발행은 재정불량국가에 대해 EU가 사실상 무한보증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재정건전화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독일이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다. 그렇게 될 경우 유로존 일부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중국에는 현재의 재정우량국가들마저 위기 상황으로 끌려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도 유로본드의 성급한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의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신재정협약이 발효되고 EU 회원국들이 재정건전화법을 도입해 확고한 재정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전에는 절대로 유로본드를 도입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대선 승리 후 올랑드 대통령은 “모든 대안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능성을 검토해보자”는 입장으로,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로본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 취임 직후 독일과의 양국 정상 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난 5월 23일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식 EU 정상회담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의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긴축정책을 양보하기가 어렵고, 프랑스는 6월 10일(1차 투표)과 17일(결선투표)의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공약으로 내건 성장 위주의 정책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총선 이전까지는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극적인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 사이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면 별도의 회동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서로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견을 좁히는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랑드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한편으로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효과적 극복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정책 논쟁 수준의 문제 제기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와 독일 간의 관계 설정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올랑드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지금까지의 프랑스-독일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파워 게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프랑스-독일 관계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돼 왔으며, 현주소는 어디인가? 특히, 양국 관계는 유럽통합의 틀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유럽통합과 프랑스-독일 관계

유럽통합은 원래 매우 정치적인 동기에서 출발했다. 독일과 소련 문제의 해결이 바로 그것이다. 소련문제는 2차 대전 후 생성된 냉전 체제하에서 서유럽에 가해지던 소련과 동구권의 위협을 일컫는다. 유럽통합은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회생과 결속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서유럽을 보호하고자 했던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유럽통합은 오랜 세월 지속된 독일문제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독일문제는 독일에 의한 안보 위협을 뜻한다. 프랑스는 1870년에 발발한 보불전쟁, 1914-1918년의 1차 대전, 그리고 1939-1945년의 2차 대전에서 독일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면서 두 차례나(보불전쟁과 2차 대전) 파리를 포함한 국토의 상당부분을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근대 이후 프랑스에게 독일은 역사적으로 최대의 안보 위협이었던 것이다. 주변의 중소국가들도 마찬가지다. 20세기 들어 독일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은 독일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큰 관심사였

¹ 본 원고는 2012년 6월 13일에 마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는 독일에겐 슈만플랜을 통해 유럽통합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고,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던 독일은 유럽통합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다시 국제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다. 결국 유럽통합은 독일을 유럽의 틀 속에 묶어둠으로써 독일이 다시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의 열망, 그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의 안전보장장치에 대한 필요성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후 유럽통합은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리더로서의 프랑스와 유럽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가진 독일 두 나라의 공동 리더십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었다. 하지만 양국의 공동 리더십의 내부적 역학관계는 주로 프랑스의 주도와 독일의 호응의 형태로 작동해 왔다. 이러한 역학관계가 잘 작동할 때는 유럽통합의 과정이 원활했으며, 양국 간의 이견이 표출되고 봉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두 나라의 관계는 대부분의 시기 동안 대체로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나라도 혼자 힘으로는 유럽통합을 끌고나갈 수 있는 역량이나 정통성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양국 간 공조체제의 구축은 구조적 요청이었다. 그리고 양국의 지도자들 간에 형성된 호의적 관계 또한 양국의 공동 리더십이 순조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윤활제 역할을 했다. 1970년대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과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의 관계가 그러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의 헬무트 콜 수상의 우정이 그러했다.

그러나 독일 통일과 EU의 확대는 프랑스-독일 공동 리더십의 구도를 위협한다. 먼저 독일이 때때로 유럽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태를 보이자 프랑스와 독일의 파트너십의 견고성에 대한 회의

가 제기됐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EU 회원국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EU의 의사결정 제도에서 차지하고 있던 힘의 상대적 크기가 급격히 위축돼 더 이상 프랑스-독일의 공동 리더십이 유의미한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프랑스는 2005년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조약의 비준을 거부한 것이 유럽통합에 대한 의지가 약화됐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EU 내에서 입지가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정위기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났듯이 EU가 위기에 봉착하거나 유럽통합이 교착상태에 처해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프랑스와 독일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재정위기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 리더십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프랑스가 주도하고 독일이 이에 반응하는 방식이었다. 프랑스의 주도와 독일의 호응으로 유럽통합의 진전이 이루어진 예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창설로 구체화된 유럽통합의 출발 자체가 그랬으며, 지금도 EU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공동농업정책의 도입과 발전이 그랬고, 1970년대 말의 유럽통화체제 도입과 1990년대 단일통화의 추진 또한 프랑스의 주도와 독일의 호응으로 진행됐다.³

그런데 이번 재정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거꾸로 독일이 주도권을 쥐고 프랑스가 따라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는 독일의 경제 규모가 크고 경상수지와 재정상태가 건전했기 때문에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독일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리스 발 유로존 재정위기는 독일의 경제 강국으로서의 중량감과 위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으며, 프랑스-독일 간의 역학관계에서도 힘의 중심추가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동하고 있음을 감지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이제는 독일 총리 메르켈이 결정을 내리면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기자회견에서 그녀의 결정에 대해 설명”을 하는 패턴이 된 것이다.⁴

‘메르코지’라는 용어는 바로 이러한 역학관계의 변화를 반영한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이 용어를 언론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사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관계는 처음부터 그다지 원만한 편은 아니었다. 차분하고 신중한 스타일의 메르켈은 활기차고 쇼맨십이 강한 사르코지와는 첫 대면에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고, 두 정상은 이후에도 계속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다가 유로존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두 정상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져 “메르코지”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의 합성어가 ‘사르켈’이 아니라 ‘메르코지’였다는 점이다. 과거 양국 정상 간의 우호적 관계를 묘사할 때는 프랑스 대통령의 이름을 앞에 두고 독일 총리의 이름을 뒤에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메르코지라는 말은 그 순서를 뒤집은 것으로서 양자 간의 힘의 균형에 있어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재정위기 해법의 모색에 있어 올랑드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일정 부분 프랑스-독일 관계의 이러한 양상을 역전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올랑드 대통령의 국내정치 게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갓 취임한 올랑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5년 임기 동안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프랑스 의회에서 여당인 사회당이 다수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6월 10일 1차 투표, 17일 2차 투표가 치러질 프랑스 총선까지 올랑드 대통령은 승리를 위해 자신만의 색깔을 부각시키면서 프랑스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 나아가 메르켈 독일 총리와 차별화된 자신의 목소리

를 냄으로써 프랑스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지나치게 끌려다녔다는 인상을 주면서 프랑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올랑드 대통령은 이를 치유함으로써 프랑스의 자존심과 위상을 회복하려는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것, 유럽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책무임을 밝히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의 취임사가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⁵

프랑스와 독일 간 역학관계의 변화와 유럽통합 전망

현재 올랑드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힘겨루기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6월 17일로 예정된 그리스 총선의 향배가 불투명하고, 스페인의 은행 부실화가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나면서 유로존 재정위기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른 프랑스-독일의 대결 구도가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이나 유럽통합의 미래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올랑드 대통령이 총선 후 프랑스 내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다음에는 메르켈 총리와의 우호적 관계 구축에 나설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메르코지 연합보다 메르켈-올랑드 연대가 보다 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메르코지 연합은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양국의 합의 내용을 다른 나라들에게 강요한 반면, 메르켈-올랑드 구도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다른 입장을 대변하는 가운데 협상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 각자가 대변하는 진영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진영의 대표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상태

² Kramer, S. P. (2006). The End of French Europe? *Foreign Affairs*, 85(4), 127.

³ Schild, J. (2010). Mission Impossible?: The Potential for Franco-German Leadership in the Enlarged EU.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8(5), 1370.

⁴ Guerot, U. & Leonard, M. (2011). The New German Question: How Europe Can Get the Germany It Needs.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4.

⁵ 올랑드, 프랑수아 (2012. 5. 15.). “대통령 취임사”.





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EU 회원국들은 합의 결과를 더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프랑스-독일 연대의 역할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⁶ 양국의 공동 리더십이 가장 잘 발휘된 것은 회원국 전체의 의견이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양국이 각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운데 타협점을 찾아냈을 때라고 한다. 반면 두 나라가 같은 입장을 취하고 다른 회원국들이 이와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할 때, 또는 회원국들 간의 의견이 사분오열되어 프랑스와 독일이 미처 대변하지 못하는 입장이 존재할 때는 프랑스와 독일 간의 합의를 다른 회원국들이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전자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결탁에 의거한 독주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프랑스와 독일의 합의가 반영해주지 못하는 입장을 가진 회원국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재정위기는 회원국들의 입장이 긴

축과 성장 양편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의 입장을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대변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프랑스와 독일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는 정당성을 확보한 합의안으로 인정될 것이며, 양국 공동의 리더십이 다시 한 번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번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프랑스 사회당의 대선 승리로 촉발된 프랑스와 독일의 대결 양상은 일반적인 관측과 달리 프랑스-독일 공동 리더십을 공고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재의 재정위기 해결과 향후 재정 통합과 같은 유럽통합의 심화 과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최진우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⁶ Schild, J. (2010). Mission Impossible?: The Potential for Franco-German Leadership in the Enlarged EU.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8(5), 1387.



한-EU FTA 발효 이후 對EU 교역 및 투자 평가

Korea-EU FTA: An Assessment of Trade and Investment in the EU

Since the Korea-EU FTA became effective, the trade performance has been disappointing, and it is worse than many expected. Korea's total trade increased by 11.3% between July, 2011 and April, 2012 while that between Korea and the EU decreased by 0.9%. However, it is too early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FTA since it only came into force a year ago. The availability of trade data is limited and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net effects of the FTA. The poor showing of exports is attributed more to the reduction in demand caused by the fiscal crisis in Europe than to the lowering of tariffs.

한-EU FTA 출범 10개월간 對EU 교역이 0.9% 감소

2012년 7월 1일은 한-EU FTA가 잠정 발효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이다. 한-EU FTA는 세계 최대시장이자 주요 교역파트너인 EU와의 무역 및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었다. 특히 FTA 협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관세인하 스케줄이 원만하게 타결되면서 한국기업들은 EU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한-EU FTA가 발효된 지 10개월이 지난 4월까지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실망스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중 한국의 전 세계 수출은 9%, 수입은 13.9% 증가하여 전체 교역이 11.3% 증가한 반면, 한-EU 교역은 지난 10개월(2011년 7월~2012년 4월) 동안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9% 감소하였다. 특히 EU 수출이 12.5%나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EU 무역수지 흑자도 112억 달러나 줄었다.

이러다보니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가 과장되었다거나 아니면 EU와의 FTA 추진시점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EU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감소만을 보고 한-EU FTA의 효과를 평가절하해서는 곤란할 듯하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10개월이 지난 통계만으로 한-EU FTA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FTA의 순수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EU 수출 부진은 FTA의 관세인하 효과보다 유럽 재정

★ 한-EU FTA 발효 10개월간 교역 동향

구분	수출	수입	교역
對세계	4,627(9.0%)	4,436(13.9%)	9,063(11.3%)
對EU	422(-12.5%)	405(15.0%)	827(-0.9%)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기로 인한 EU의 수입수요 감소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한-EU FTA가 대EU 교역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혜관세 품목의 수출 호조가 선박, IT 제품 등 무관세품목의 수출 부진을 만회

한-EU FTA가 발효된 후 10개월 동안 한국의 대EU 수출은 60억 달러 줄었다. 수출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기존의 무관세품목인 선박, IT 제품의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선박(-47.8%), 무선전화기(-44.6%), 평판 디스플레이(-23.5%), 집적회로반도체(-36.3%) 등 기존의 무관세 4대 품목의 대EU 수출을 보면, 무려 96억 달러나 감소하였다. 반면, 특혜관세 혜택 품목의 수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62.7%), 제트유 및 등유(519.6%), 자동차부품(16.7%), 합성수지(28.3%), 건설 중장비(33.0%), 타이어(18.3%)는 특혜관세 혜택 품목 중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들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만 대EU 수출이 62.7% 증가



해 25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마디로 대 EU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에서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한-EU FTA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들이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로 EU의 전체 수입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대EU 수출은 한-EU FTA 혜택을 받는 품목들의 수출 호조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한-EU FTA가 대EU 수출의 급격한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대EU 수출도 활기를 띠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1년 중소기업의 대EU 수출은 2006~2010년 증가율(7.6%)보다 크게 증가한 18.9%를 기록하였다. 중소기업 품목 중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 품목의 수출은 무관세 품목(9.9%)보다 훨씬 높은 26.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대EU 수출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1월 0.17%에서 2011년 12월에는 0.20%까지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대일 역조 해소 가능성도 엿보여

한-EU FTA 출범 10개월 동안 한국의 대EU 수입은 약 53억 달러 증가하였다. 이는 항공기, 나프타 등 기존의 무관세품목의 수입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무관세 5대 수입품목의 수입액은 15억 6,000만 달러 증가하였다. 특히, 신형 항공기인 A380 4대를 구입함으로써 9억 6,000만 달러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증가하였다. 한편, 특혜관세 혜택 품목 중 수입이 증가한 5개 품목을 보면, 원료, 승용차, 가죽제가방, 원동기, 계측기 등으로 이들 품목의 수입증가율은 46.5%에 달했다. 또한 원유에 부과되던 수입관세 3%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10억 8,000만 달러어치의 영국산 브렌트유가 처음으로 국내에 수입되었다.

한-EU FTA는 앞으로 대일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 수입업체의 수입선 전환은 물론 일본기업들의 한국 투자로 인해 대일 수입이 줄어들 가

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2012년 3월 실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약 68%가 한-EU,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대일 수입 비중을 낮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FTA 발효 이후 EU의 한국 투자가 증가

한-EU FTA 체결로 인해 관세 철폐, 서비스시장 개방, 투자자유화, 제도 선진화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유럽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EU FTA 발효 9개월간의 투자동향을 보면, EU의 한국 투자는 35억 7,000만 달러(신고 기준)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61%가 증가한 규모다. 전년 같은 기간 중 일본의 한국 투자가 26.7% 증가하고, 미국은 17.8% 감소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에 따라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도 20.7%에서 33.5%로 12.8%p 증가하였다.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제조업 투자가 8.3억 달러에서 16.6억 달러로 100% 이상 증가했다. 화공(6.3억 달러), 전기전자(2억 달러), 가구(1.1억 달러), 금속(8,000만 달러) 분야에서 특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한편, 서비스업부문에서도 13.9억 달러에서 19.1억 달러로 EU의 한국 투자가 60% 증가했는데, 금융보험(5.2억 달러), 문화오락(1.2억 달러), 비즈니스서비스(4,000만 달러), 도소매 분야(2,000만 달러)에서 투자가 집중되었다.

정부와 기업은 FTA 활용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

지난 10개월간의 교역 및 FDI 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한-EU FTA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은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수출 증가를 기록했으며, 섬유, 농산물, 신발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도 수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EU 투자기업들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한국을 선택하여 한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대일 무역역조 개선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한-EU FTA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한-EU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 수출기업들은 한-EU FTA 활용체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 첫째,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서둘러 취득해야 한다. 1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인증 수출자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이 허용된다. 기업들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관세인하 혜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수출기업은 수입국 검증 당국이 사후에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EU는 한-EU FTA 발효 이후 중국산 제품이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국산으로 둔갑해 대거 EU로 수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세추징과 벌금부과는 물론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수출기업들은 한국과 상이한 EU의 품목 분류 체계에 유의해야 한다. EU 품목 분류(CN)와 한국 품목 분류(HS) 체계의 차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EU 시장 진출 전략을 적극 추진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EU 무역환경의 변화는 한국에게 EU 시장점유율 확대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우선 FTA의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EU에 대한 수출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한국기업으로서는 관세 인하분만큼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마케팅 활동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년 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EU의 통상정책 변화도 EU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U는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GSP(일반특혜관세) 수혜대상에서 중국 등

BRICs 국가를 제외할 방침이다. 이러한 유리한 무역환경을 바탕으로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은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력으로 서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 서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제품 차별화 노력과 함께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원가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미국, 일본 사이에서의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녹색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유망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의 녹색기술과 한국의 IT 및 제조 기술을 접목하는 산업협력을 통해 그린비즈니스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소수 대기업형 품목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수출제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수출제품의 다양화 없이는 한-EU FTA의 폭넓은 관세인하 혜택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야만 수출산업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 트렌드를 수시로 파악해 국가별로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EU의 공공구매시장이나 프라이빗 브랜드(PB)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유럽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글로벌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프라이빗 브랜드 제품의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EU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우대금리 적용, 수수료 감면,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과 함께 기술개발 자금, 해외시장 개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다품종 소량 주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코트라는 현재 유럽에 공동물류센터 4곳과 공동 AS 센터 1곳을 운영 중이다.





외국기업과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

한-EU FTA는 외국기업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한국에 투자하여 EU 수출에 나서려는 외국기업들이 늘고 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을 대EU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기업은 안정적인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한국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U와 일본은 머지않아 EPA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나, 협정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울러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였던 한국기업의 국내 회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FTA 시대를 맞아 기업은 원산지 기준 충

족과 원가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재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FTA의 관세인하 효과 덕분에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한국 생산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 중인 한국기업은 국내 회귀를 고려해볼 만하다. 더 이상 관세장벽 회피 목적의 대EU 투자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FTA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려면 원산지 규정의 영역 요건(국내 가공 및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해야 하므로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의 정착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EU의 재정긴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

EU Austerity and the Future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ies

Most countries in the EU have been tightening their fiscal policies since the sovereign debt crisis began. As a part of their austerity measures, they are cutting their expenditure on renewable energy industries after expanding significantly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rupted back in 2008 as a fiscal stimulus. In 2011, as the Spanish government believed that the clean energy industry is now competitive enough to survive in the market, it has announced specific policies to reduce its subsidies on renewable energy. Also, even Germany, whose economy is growing relatively strongly compared to other weak EU members, has imposed measures to reduce its feed-in-tariff subsidies. These measures in the EU have led to a decline in total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industries in recent months.

EU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 증가세 둔화

2011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6.5%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인 2,372억 달러를 기록했다.¹ 2011년보다 42% 증가한 481억 달러를 투자한 미국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와 동시에 2011년에는 태양광 패널 가격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비용이 줄어들고 해당산업 기업의 생산 확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²

하지만 유럽의 투자는 993억 달러로 2011년 대비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의 투자는 각각 39%, 34%, 25%, 36% 증가하며 선방한 반면, 독일의 투자는 5% 감소했고 주요 5국³을 제외한 22개 EU 회원국의 투자는 2010년 152억 달러에서 2011년 111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기타 EU 국가 중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위기국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대폭 감소했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긴축

현재 위기국들은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유로존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EU의 해결책도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프랑스 대선에서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고,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가 제2당으로 부상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또다시 출렁이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그리스의 선거 이후 유로존 회원국들이 경제 성장과 긴축을 놓고 줄다리기를 시작하면서 리스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위기국들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긴축정책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구제금융의 조건부인 강력한 긴축과 신재정협약의 정부지출 축소 규정을 완화해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부채의 증가폭은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재정수지에서 정부부채의 이

★ 2011년 세계 10대 신재생에너지 투자국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명	2010년	2011년	증가율
1	미국	337	480	42.4
2	중국	450	455	1.1
3	독일	321	306	-4.7
4	이탈리아	202	280	38.6
5	기타 EU 22개국	152	111	-27.0
6	인도	66	102	54.5
7	영국	70	94	34.3
8	일본	70	86	22.9
9	스페인	69	86	24.6
10	브라질	69	80	15.9

자료: The Pew Charitable Trusts (2012), Who's winning the clean energy race? The 2011 Edition.

¹ The Pew Charitable Trusts. (2012). Who's winning the clean energy race? The 2011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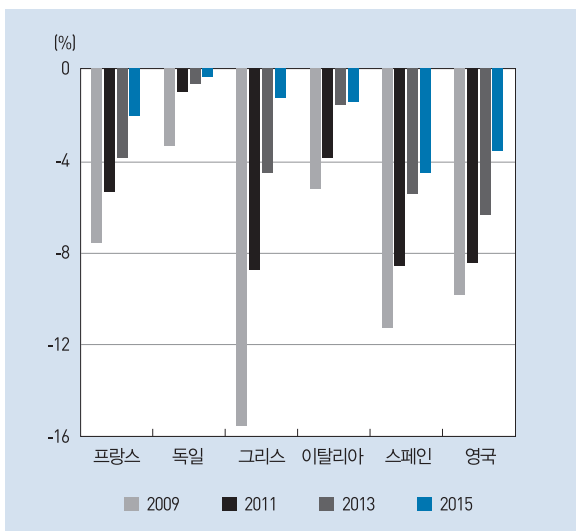
² 2011년에 추가된 풍력발전 설치 규모는 83.5GW, 태양열발전 설치 규모는 29.7GW를 기록.

³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 EU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수지



자료: IMF, WEO.

자를 제외), 그리고 국채금리와 GDP 성장률의 차이로 결정된다. 국채금리와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 정부부채의 증가세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재정수지 규모가 달성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경제 성장은 정부부채를 축소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재정위기 발발 이후 위기국을 포함한 EU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재정정책을 긴축 모드로 전환했다. 재정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중심국들도 역시 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위기에 따른 유로존의 전반적인 리스크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국가들조차도 긴축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EU의 여러 국가들은 긴축안을 달성하기 위해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방안을 축소해나가고 있다.⁴

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금액은 세계 전체 약 2,000억 달러로 추정(Bloomberg, New Energy Finance DB).

⁵ European renewables and austerity- Italian edition. (2012.3.29), Forb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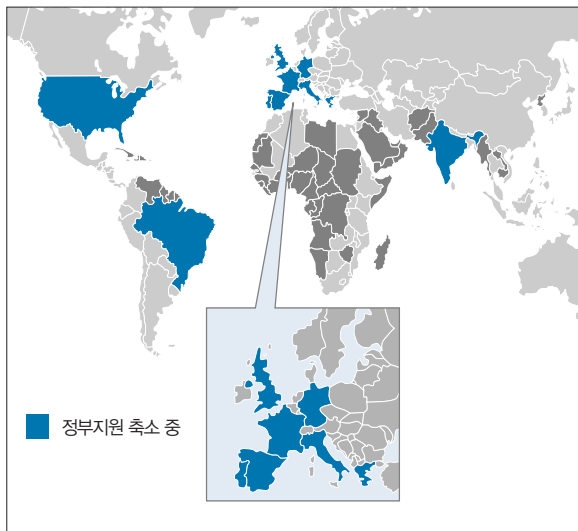
당시 세계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녹색산업이 EU에서는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채 벌써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 축소

유럽 재정위기는 2011년 말에 이탈리아로, 2012년 중순에 스페인으로 퍼져나갔다. 현재 이 두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규모와 성장률 차원에서 EU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스페인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이후 경제와 정부 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페인은 여타 위기국들에 비해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지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위기에 빠졌고 결국 정부가 대규모 구제금융을 은행들에 투입해야 했다. 이후 재정위기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확산되고 국채금리가 치솟기 시작하자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긴축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2012년 초에는 2011년 재정적자가 목표에 미달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긴축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스페인 정부의 긴축안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스페인 정부는 저탄소 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2011년 말 스페인 정부는 이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이 자생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면 지원금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고, 2012년 1월에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는 스페인 정부가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중심의 중장기 경제성장 모델을 포기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면서 해당산업의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스페인과 더불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도 태양광에너지 지원 축소 및 지원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5차 에너지계획(5th Conto Energia)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⁵

★ 신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국가



자료: Liebreich, M. (2012), Global trends in clean energy investment, Clean energy Ministerial (pp. 14), May 25, London, United Kingdom.

유로존에서 나 홀로 성장 중인 독일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독일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보조금 삭감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정부는 2011년에 태양광발전 설치 규모가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다면서 향후 설치 규모 목표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011년에는 7.5GW 용량의 태양광 발전이 설치되었는데, 독일정부는 2012년과 2013년 목표치를 2.5~3.5GW로 조정할 계획이다.⁶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태양광 발전 지원금을 약 50% 줄인 수준에서 2012년 3월에 추가로 20~29%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정부는 개인이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면 이를 전력회사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구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최근 이를 통한 태양광 전력 공급이 급증하면서 독일정부의 부담이 가중되자 지원금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⁶ Germany plans record cuts in solar subsidies to limit boom. (2012. 2. 23.), Bloomberg.

독일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표한 151억 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책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독일정부의 지원이 2010년 89억 달러에서 2011년 62억 달러로 감소했다. 2011년 말 기준 지원 예산의 잔액은 2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더불어 영국, 프랑스 등 여타 EU 회원국들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을 줄여나가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12년 1/4분기에 전 세계 투자 규모가 26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2%, 전 분기 대비 28%나 하락했다. 유럽의 투자가 2011년 3/4분기 대비 반 토막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이끌었다. 앞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회원국들에 대한 긴축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며 당분간 투자가 예전과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부상에 따른 EU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미래:

민간 주도로 성장이 가능한가?

이 같은 상황에서 EU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의 민간 주도 성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 삭감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⁷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EU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제품에 밀려나고 있다. 그리고 EU 기업들이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재생에너지 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자들과 전력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관련 장비 및 부품 제조업체들에게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패널의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2011년 3월에 폴리실리콘 가

⁷ Will austerity derail Europe's clean energy movement? (2012. 2. 10.), Time.





격이 1kg당 79달러로 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기 시작했다. 2012년 연초에는 28~30달러 선에서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4월 들어 25달러 선이 붕괴되었다. 풍력터빈 가격지수도 2010년 상반기 1MW당 1.06유로에서 2011년 하반기 0.94유로까지 하락했다. 그리고 리튬이온 전기가동차전지 가격은 2009년 1kWh당 1,000달러 이상 수준에서 2012년 1/4분기 689달러로 하락하였다.⁸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녹색산업 붐과 함께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등 신흥국에서 저가 경쟁자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태양광 4대 천왕인 선테크파워, 잉리솔라, 트리나, 자솔라가 저가 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이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4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신흥국 정부가 재정위기에 빠진 선진국 정부보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더욱 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 또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독일 업체들은 2004년에 세계 태양전지 매출의 69%를 차지했는데, 2010년에는 21%까지 하락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때 세계 태양광 산업을 주도했던 독일기업들이 연이어 파산하고 있다. 2011년부터 솔라하이브리드, 솔론, 솔라밀레니엄 등 독일의 대표기업들이 파산했고, 2012년 4월에는 한때 세계 최대 태양전지 업체였고 독일 태양광산업의 1위였던 큐셀이 파산신청을 했다. 큐셀은 2007년 말 기준 시가총액이 80억 유로(현재 가치로 107억 유로)에 달했고, 독일 비터벨트-볼펜 지역의 솔라밸리를 주도해온 기업으로 큐셀의 파산신청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011년 큐셀은 아시아 업체들과의 경쟁을 이겨내지 못해 8.5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했고, 시가총액은 3,500만 유로로 곤두

박질했다.

물론 독일정부의 지원금 감축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독일 태양광산업 몰락의 가장 큰 이유는 2008~2009년 패널가격이 높았을 당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독일 업체들이 안일한 전략을 지속했기 때문이다.⁹ 중국 업체들은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선테크 파워는 독일의 'TSG 1899 호펜하임' 축구팀을, 잉리솔라는 '바이에르뮌헨' 축구팀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도 빠르게 개선되며 독일 업체들을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

EU 내 신재생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정부의 지원 축소를 계기로 EU의 태양광산업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민간수출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⁰ 또한 민간 주도의 사업 확장은 일조량이 많은 유로존 위기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EU집행위가 2011년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리스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헬리오스'는 그리스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 폐기를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이를 통해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그리스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현재 206MW에서 2020년 2.2GW, 2050년 10GW로 확대해 그리스가 EU의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그리스가 전력수출국으로 전환되고 동시에 3만~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발을 위해 200억 유로 이상의 투자자금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의 일조량이 독일의 50% 이상인 반면, 태양광 발전 전력량은 80분의 1

⁹ Bankruptcies have German solar on the ropes. (2012.4.3.). *Spiegel*.

¹⁰ "태양광 치킨게임... 30개 폴리실리콘 업체가 5~7로". (2012.4.1.). 『중앙 Sunday』.

수준에 불과해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¹ 앞서도 언급했듯 정부 재정 안정화에는 경제 성장이 매우 중요한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이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EU는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의 2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확보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중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유로존 위기국들의 높은 일조량과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 그리고 낮아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고려하면 이 목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동안

선두자리를 지켜왔던 해당 분야의 EU 기업들의 몰락이 유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EU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EU와 FTA를 맺고 있는 한국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저가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한국기업들 간의 공동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한국기업들은 EU 위기국들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⁸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2). Q1 2012 Clean energy policy & market briefing.

¹¹ Greek and German officials call for investments in Greek Solar Energy. (2012.4.3). *The Wall Street Journal*.





EU의 환경보호 관련 법체계

EU Environmental Policy

The Treaty of Lisbon, the revised Treaty of the EU, regulate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at protection on the third clause of Article 3. The Treaty of Lisbon includes three Articles i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for environmental integration and they are Article 11(principle for integration regarding environment), Article 13(principle for integration regarding animal welfare), and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194(principle for integration regarding energy policy). The institutional innovation that can affect environmental policies introduced by the Treaty of Lisbon is the citizens' initiative. Also, the Treaty of Lisbon introduced the qualified majority voting in more areas, resulting in shorter decision-making processes.

리스본조약과 EU환경법

리스본조약은 EU의 환경정책¹과 관련하여 사실 주요한 변경을 가하고 있지 않다.² 리스본조약에 따라 개정된 EU조약은 전문과 제3조 3항에서 EU의 목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EU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발전까지도 아우르는 목표로 보인다. 또한 제21조에 규정된 목표는 일반적인 대외정책(external action)의 방향을 결정하며, 제21조 3항의 통합규정에 따라 강화된다.³ 또한, EU기능조약 제13조에는 동물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리스본조약은 처음으로 동물을 '생명이 있는 존재(sentient beings)'로 간주하였다.

통합원칙과 관련하여 리스본조약은 3가지 차원의 환경통합원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EU기능조약 제11조(환경에 관한 통합원칙), 제13조(동물복지에 관한 특별통합원칙) 및 제194조 2항(에너지정책에 관한 특별통합원칙)이 그것이며, 이들 통합원칙 간에는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⁴

EU기능조약 제191조와 제193조는 환경과 관련된 독립 조항이 있는데, 동 조약은 기존 현실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⁵ 그러나 제191조는 구체적인 환경정책의 목적으로 '환경의 보존(preserve), 보호(protect) 및 개선, 인체건강보호, 자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용, 지역 및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정책수단의 개발' 등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특히 동 조항에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도입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⁶ 제192조 5항에서는 환경정책 추진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이 부담하되 회원국이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럽이사회가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회원국의 부담을 유예하거나 제177조상의 EU공동기금(Cohesion Fund)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지원기금, 구조기금, 공동기금 등을 통해서도 EU 역내·외 환경정책 추진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보전 네트워크(Natural 2000) 사업, 환경

기술지원, NGO 환경사업지원 등이 그 예다. 제193조는 동 조약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회원국들이 EU 차원의 정책보다 엄격한 환경정책을 유지하거나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EU집행위에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U기능조약 제194조에 EU의 에너지정책이 독립된 장의 일부로 삽입되었다는 사실은 개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EU는 에너지정책을 환경 관점에서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이 도입한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은 시민발안권 제도이다.⁷ 시민발안권 제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민의 주도로 유럽집행위원회에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리스본조약은 가중다수결제도를 보다 많은 영역에 도입함으로써 의사결정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환경정책은 과거 공동 결정 절차를 수정한 보통입법 절차를 따르게 하여 다소 실망을 안겨주었다.⁸ 그러나 유럽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면 환경 관련 법안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⁹ 한편, 에너지정책과 달리 환경세 관련 입법 절차시에는 EU기능조약 제192조 2항에서 경제사회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권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에너지에 관한 환경세의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¹⁰

리스본조약은 EU기능조약 제258조를 통해 조약위반소송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환경법은 물론 유럽법 전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제260조 3항에 특별절차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취소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제263조에 의거해 기존의 전제요건이 축소되었다.¹¹

리스본조약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EU헌법제정조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환경단체들이 영향력을 행

★ EU조약과 EU기능조약의 환경관련 주요규정

EU조약	내 용
제3조 3항	EU의 목표 (지속가능한 개발, 수준 높은 환경 보호와 환경 수준 개선)
제21조 2항 (d), (f)	지속가능한 환경 개발 장려 및 환경 수준의 보존과 개선

EU기능조약	내 용
제11조	통합원칙, 지속가능한 개발
제13조	동물복지 요건
제34-35조	수입 및 수출품에 대한 수량제한 금지
제36조	제34조와 제35조의 예외 (인간, 동물 및 식물의 건강 및 생명 보호)
제114조	역내시장과 법의 조화
제191조	환경보호
제192조	환경보호의 법적 근거
제193조	환경보호에 관한 보다 엄격한 국내 조치

사하는 것도 훨씬 어려워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EU법이 환경문제와 역내시장의 완성이라는 두 중요 이슈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²

EU의 환경에 관한 입법행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U는 이차적 연원을 통해서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왔다. 이러한 공동체 입법행위는 EU기능조약 제288조에 규정된 구속력이 있는 규칙, 지침과 결정, 구속력이 없는 권고와 의견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관행을 통해 발전한 특별한 법률행위(legal act sui generis), 예를 들어, 기관 간 협정(inter-institutional agreements), 결론(conclusions), 결의(resolutions), 통보(communications), 녹색(green papers), 백서(white papers) 등도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¹³

최근 들어 규칙, 지침은 물론이고, 결론, 결의, 통보,

¹ EU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environment/index_en.htm> 참조.

² Vedder, H. (2010). Analysis: The Treaty of Lisbon and European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22(2), 286.

³ 위의 책, 288.

⁴ 위의 책, 289.

⁵ 위의 책, 290.

⁶ 위의 책, 291.

⁷ EU조약 제11조 4항.

⁸ EU기능조약 제192조 1항.

⁹ 각주 2의 책, 299.

¹⁰ 위의 책, 294.

¹¹ 위의 책, 296-297.

¹² 위의 책, 298-299.

¹³ EU집행위원회<http://europa.eu/scadplus/glossary/community_legal_instruments_en.htm> 참조.





백서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환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오존층 보호, 산업 배출물, 생물다양성, 재해예방, 동물 복지 등과 관련된 법률이 많이 제정되고 있는데,¹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환경에 관한 국제조약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하며, 국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해서만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EC설립조약은 환경에 관한 공동체 정책에 있어 지역 또는 국제적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왔다. 그리하여 공동체는 다자간 국제협정의 기초, 비준 및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¹⁵ 예컨대 공동체는 회원국과 함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같은 주요 다자간 환경협정에 가입하여¹⁶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또는 비회원국과 협력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특히 비회원국과 합의한 준회원협정(Association agreements)을 통해 환경보호에 관한 조약체결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EU법의 환경에 관한 원칙

1) 일반원칙

EU는 공동체 환경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전제로서 도입된 보충성의 원칙은 공동체의 배타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그리고 환경정책의 목적을 회원국이 달성할 수 없거나 규모나 영향 면에서 공동체가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공동체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⁷ 보충성의 원칙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일반원칙이 비례성의 원칙이다. 이는 공동체가 취한 모든 행위는 조약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례하여 최소한의 부담을 부여해야 하고, 공동체의 조치는 최대한 간결하고 목적 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¹⁸ 이러한 비례성의 원칙은 공동체가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환경원칙

EU법상 일반원칙은 공동체법 우위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다. 암스테르담조약은 제174조 2항¹⁹에 수준 높은 보호원칙, 예방원칙(prevention principle), 세이프가드조항,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²⁰ 원천원칙(source principle),²¹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²²과 같은 유럽환경법의 일반원칙을 고안하고 발전시켰다.²³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²⁴도 중요한 환경원칙으로

¹⁷ EU기능조약 제5조 1항, 3항

¹⁸ EU기능조약 제5조 1항, 4항.

¹⁹ 동 조항은 EU기능조약 제91조 2항으로 개정되었다.

²⁰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오염의 원인 제공자는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오염 제거 및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물론 오염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오염원인 제공자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²¹ 환경침해는 원천을 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²² 특정 물질 또는 특정 행위가 환경보호와 인체건강보호에 악영향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악영향의 우려 내지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실제 EU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한편, 환경은 한 번 오염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사후 치유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예방 원칙과는 환경에의 유해성을 미리 인지 혹은 예견할 수 있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즉,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인지 혹은 예견 가능한 경우에는 예방 원칙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오염 예방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무엇이 환경유해성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원칙을 분명히 구별하기 힘들다.

²³ Engel, E. (2009). General Principles of European Environmental Law. Penn State Environmental Law Review, 17, 218: 221-223.

²⁴ EU조약 제3조 3항, 제21조 2항, EU기능조약 제11조: 미래 세대의 성장능력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정된다. 이외에도 당해 배출원 또는 오염자에 대한 직접 규제를 환경세 등 간접 규제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근접성의 원칙(proximate principle)이 있다.

EU 사법재판소의 환경 관련 판례법

EU 사법재판소는 유럽통합은 물론이고, 유럽환경법의 이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²⁵ 환경 문제에 관한 수많은 판례를 축적하였다. EU의 환경 관련 판례 중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예외조치와 관련된 몇 개를 살펴보면,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수량제한금지조치가 환경보호와 같은 ‘필수적 요건’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Preussen Elektra 사건에서 동 재판소는 환경보호 요건이 다른 공동체 정책의 개념과 이행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자원의 사용 의무는 舊EC설립조약 제28조

(EU기능조약 제34조)와 합치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Wallon Waste 사건에서는 쓰레기의 자유로운 이동 금지는 舊EC설립조약 제30조(EU기능조약 제36조)의 환경보호 요건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결정하였다.

최근에는 동 재판소의 법률고문관이 유독성 가솔린첨가제 사용이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일은 환경라벨링의 합법적 목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및 사전주의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EU 사법재판소는 EU의 환경보호정책에 역내시장, 경쟁정책 및 국가원조와 같은 다른 필수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비중을 부여하기 위해 목적론적 해석을 함으로써 환경법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²⁵ Wennerås, P. (2007). The Enforcement of EC Environment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10.





유럽연합(EU)의 언어

Languages in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Union, consisting of 27 members, has 23 official language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the EU respects multilingualism, it treats small countries' languages as official ones. French language were at the center of European integration as three countries of six founding members, namely France, Luxembourg, and Belgium were using French as an official language. However, it seems that the European Union is becoming an English-speaking zone. The power of French language in Europe is declining, but the power of French in the world is still strong.

EU의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의 공식 언어는 23개다. EU가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를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작은 회원국의 언어도 EU 공식어로 대우받고 있다.¹

EU가 공식어로 23개 언어를 채택함에 따라 통·번역에 드는 연간 예산이 자그마치 10억 유로(한화 1조 5,000억 원)나 된다. 다언어주의에 따른 막대한 비용 지출이다. EU의 문서 번역사 수는 2,000명이나 되고, 23개 언어별로 하루에 80명의 통역사가 필요하다. 유럽의회는 785명의 유럽국회의원(MEP: Member of European Parliament)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60명의 통역사를 고용했다.

인구 37만 명이 사용하는 몰타어가 EU 공식어로 인정받는 반면, 스페인 내 카탈루냐 지방의 700만 명이 사용하는 카탈루냐어는 공식어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듯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가에 따라 공식어, 비공식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카탈루냐어가 추가로 EU공식어가 된다면, EU는 또 다른 통번역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번역사와 통역사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때가 있다. 실제로 한 농업 관련 실무모임에서 영어로 '냉동 정액(frozen semen)'을 프랑스어로 '얼어버린 선원(frozen seamen)'으로 통역한 적이 있다. 또, EU는 번역비용 절감을 위해서 컴퓨터 번역기를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역시 기계는 사람보다 못하다. 한 예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표현을 컴퓨터 번역기는 “보이지 않는 미친 사람”(invisible lunatic)으로 번역하여, 본래 뜻을 완전히 왜곡한다.

언어별 특징과 편견

언어는 문화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라파이유는 저서 『컬처 코드』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안경을 쓰려면,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럽 언어의 차이점을 보는 눈은 문화적 차이를 볼 수 있는 안경과도 같은 것이다.

라파이유는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어로 '태양'은 남성명사인 '솔레이(le soleil)'인 데 반해, 독일어는 '태양'을 뜻하는 존재(die sonne)는 여성형이다. 즉, 프랑스인은 태양을 남성으로 인식하며, 나아가 남성을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로 보는 반면, 독일인은 여성을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사물을 자라게 하며, 아이를 기르는 존재라고 생각

한다. 프랑스어에서 여성은 달을 뜻하는 여성명사인 '룬(la lune)'과 연관된다. 한편 독일어에서는 달은 남성인 몬트(der Mond)로서 남성은 밤이고, 어둠이다. 태양이나 달과 같은 단어에서 프랑스인과 독일인이 정반대의 인식을 하는 것처럼 모든 문화는 저마다 이런 단어들에 대한 해석, 즉 코드가 다르다.

브뤼셀에 사는 필자의 영국 친구 Mr. 포드(Ford)의 일화다. 파티에서 만난 프랑스 사람에게 자신을 포드라고 소개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Mr. 르노(Renault)'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프랑스인은 '포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자동차 이름과 같구나'라고 인식하고 기억해 두었는데, 그를 다시 봤을 때 프랑스 자동차에 대한 각인이 강한 나머지 '포드' 대신 '르노 씨'라고 했던 것이다. 이처럼 어떤 곳에서 소비 문화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제품명을 상표명으로 각인하는 방식을 통해 인식도 다르게 나타나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유럽인들은 서로 다른 유럽언어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다. 사랑할 때는 프랑스어로, 욕할 때는 네덜란드어로, 노래할 때는 이탈리아어로, 신을 논할 때는 독일어로, 사냥을 할 때는 핀란드어로, 축제를 벌일 때는 스페인어로, 여행할 때는 스웨덴어로,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때는 영어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말이 있다. 거의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는 유럽언어별 특징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네덜란드사람들은 자기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분 상해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선입견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 8개의 언어에 대해 특징을 말해준다.

프랑스어가 사랑할 때 어울리는 말이라는 것은 불어가 주는 부드러운 어감에서 비롯된다. 보들레르의 낭만시를 보면, 시적 운율이 불어 속에 살아 있다. 에디트 피아프, 아다모, 실비 바르탕 등의 샹송이 주는 느낌과 연인들의 도시로 인식되는 파리가 주는 로맨틱한 이미지가 프랑스어를 더욱 '사랑의 언어'로 여기게 만든다. 프랑스어는 계몽주의 시대의 볼테르, 루소, 위고, 스탕달 같은 걸출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낭만적 언어로 자리 잡게 된다.

프랑스어는 또한 '맛있는 언어'라는 느낌을 준다. 메뉴에 '푸아그라(foie gras)'라고 쓰여 있으면 고급스러운 풍미가 느껴지는데, 영어로 'liver of duck(오리 간)'이라고 하면 웬지 먹기가 주저된다. 똑같은 재료의 똑같은 음식이 프랑스어의 어감으로 인해서 더 맛깔스럽게 들린다. 영어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뜻하는 beef와 pork가 프랑스어 boeuf와 porc에서 유래된 것도 프랑스의 식도락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증거다. 프랑스어로 요리사와 교향악단의 지휘자에게 모두 셰프(chef)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실을 보면 프랑스인들에게 음식은 예술로 비춰지는 모양이다.

네덜란드어가 욕할 때 쓰는 언어라는 편견은 영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덜란드는 아시아 지역 식민지 경영을 위해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²를 설립해 영국의 라이벌이 되었다. 경쟁국 네덜란드를 꺾어내리려는 영국의 저의가 많은 영어단어에 나타나는데, 'dutch'를 접두사로 쓰면 부정적 의미의 단어가 된다. 예를 들어, 'dutch disease' (네덜란드 질병)는 '성병'을 뜻하고, 'dutch courage' (네덜란드 용기)는 '술김에 부리는 허세'라는 뜻이며, '더치 페이'(dutch pay)는 'dutch treat' (네덜란드식 대접)에서 유래된 말로 '돈을 각자 낸다'는 뜻을 넘어 '대접 아닌 대접'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탈리아어가 노래할 때 어울린다는 것은 베르디, 푸치니, 도니체티, 마스카니 등 수 많은 작곡가의 오페라가 이탈리아어로 쓰였고, 이탈리아 대중음악인 칸초네가 주는 이미지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탈리아어는 역양 자체가 리드미컬한데다 자음과 모음의 연결이 자연스러워 발성하기 쉽다. 또 위 유명 작곡가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받침이 거의 없어 발음이 쉽고, 대부분의 모음도 밝고 명료하게 발음된다. 그래서 발성적으로 노

¹ 참고로 유엔 회원국은 192개지만, 유엔의 공식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중국어 6개 국어다.

² 1653년 한국에 온 최초의 서양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 하멜인데,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직원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류했다. 조선에 13년 있다가 네덜란드로 돌아가 조선을 유럽에 알리는 계기가 된 『하멜 표류기』를 1668년 출간했고, 그것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로 번역되면서 조선의 존재를 유럽인들이 알게 되면서 극동에 대한 식민지 경영에 야망을 심어준 책이 되었다.





래하기에 편하고 쉽다.

독일어가 신(神)을 논할 때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것은 1517년 마틴 루터가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의 항의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역사적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게다가 루터가 라틴어로 된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서 대중화의 길을 열게 됨에 따라, 독일은 신학의 발달과 함께 문학도 번성하게 된다. 특히, 독일어는 괴테, 실러, 헤세 같은 문호를 배출하면서 발전했다.

“사냥할 때는 핀란드어를 쓴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왜냐하면 사냥할 때 ‘짐묵은 굶’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말은 핀란드 사람들이 그만큼 과묵하다는 뜻이다. 겨울이 길고 추운 북유럽에 사는 핀란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대인관계가 적어 말수가 적다. 또 ‘핀란드어는 전화통화 시에 사용하는 언어’라는 농담이 있다. 한 때 세계 핸드폰 시장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했던 핀란드 통신기업 노키아 덕분에 만들어진 농담인 것 같다.

축제를 즐길 때는 스페인어를 써야 한다는 말은 ‘스페인’ 하면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는 스페인 사람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따뜻한 지중해 기후 덕에 이웃들과 잘 어울리고 대가족 중심의 생활을 하는 스페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잔치집처럼 늘 북적거리는 이미지를 준다. 이런 측면에서 스페인어는 축제와 잘 어울리는 유연한 어감을 갖는다. 게다가 스페인어는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를 비롯한 16~17세기 황금시대에 기라성 같은 문호들이 나타나 괄목할 만한 언어적 발전을 이루게 된다.

스웨덴어가 ‘여행할 때 쓰는 언어’라는 표현은 스웨덴의 법정 휴가가 연 6주인데다가 병가까지 포함하면 일 년에 한 달 반에서 두 달을 휴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EU 회원국 중 물가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유럽 어디를 가도 자국보다 물가가 저렴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은 휴가를 해외에서 많이 보낸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계절 내내 여행 중인 스웨덴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게 된다. 노르웨이와 스위스의 물가가 스웨덴보다 비싸거나 비슷하지만

이 두 나라는 EU 회원국이 아니다.

영어는 비즈니스용으로 적합하다고 한다. 영어에는 존칭대명사가 없고, 독일어처럼 긴 복합명사도 없으며,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처럼 인칭과 단수, 복수에 따른 동사변화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물건을 거래할 때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언어학자는 “영어는 엉망으로 말하기 가장 쉬운 언어다(English is the easiest language to speak badly)”라고 말했다. 이 말에도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영어는 간단한 회화를 구사하는 데에는 다른 언어를 배울 때처럼 많은 시간이 들지 않지만, 대신 문법과 발음에 예외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어가 프랑스어와 독일어처럼 지금의 국제적인 위상을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영어로 쓴 걸출한 문학작품들에 기인한다. 14세기 이후부터 초서, 모어, 셰익스피어 같은 영국 작가들의 많은 작품들 덕분에 영어가 매력 있는 언어로 인식될 수 있었다. 필자는 세계적 언어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문학적 인지도’라고 생각한다.

위 상황에 맞는 언어를 다 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라틴어족인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중에서 하나를 할 줄 알거나, 게르만 어족인 독일어, 스웨덴어, 영어, 네덜란드어 중 한 언어를 구사할 줄 알면 같은 어족 간 단어의 유사성 때문에 표기 또는 발음을 통해 해당 어족 문자의 뜻을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어의 ‘house’ (하우스)는 독일어로 ‘haus’ (하우스), 스웨덴어로 ‘hus’ (휘스)라고 표기하며 괄호 안처럼 발음한다. 정원을 뜻하는 프랑스어 ‘jardin’ (자르댕)은 이탈리아어로 ‘giardino’ (지아르디노), 스페인어로는 ‘jardin’ (하르딘)이다.

유럽 주도언어의 변천: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유럽통합은 프랑스 경제학자 장 모네의 주창으로 출발하였고,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창단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6개국 중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가 프랑스어권 국가이

기 때문에 EEC 내에서 불어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영어권이 되가는 EU(The European Union is becoming an English-speaking zone)’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추세다.³ 1970년대 이후로 유럽에서 강화되어온 영어의 입지를 EU 확대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프랑스어의 독보적 위치는 1973년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덴마크가 유럽경제공동체(EC)에 가입하면서 도전받기 시작했다. 1981년 그리스와 1986년의 스페인, 포르투갈이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는 EC 내에서 프랑스어의 입지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3개국은 언어학적으로 불어와 같은 로만스 어족이어서 영어보다 프랑스어를 더 쉽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EU 내에서 언어의 비중은 EU 최고위직인 EU집행위원장직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룩셈부르크의 가스통 토른(Gaston Thorn)이 EU집행위원장을 맡았던 1981년에서 1985년까지,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위원장으로 기록되는 프랑스의 자크 들로르(Jacques Delors)가 위원장직을 맡았던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의 10년 동안 프랑스어는 유럽의 주도적인 언어로 군림해왔다. 자크 들로르 후임으로 다시 룩셈부르크의 자크 상페(Jacques Santer)가 1999년까지 역임했지만, 자크 들로르 위원장의 퇴임 시점부터 프랑스어는 하강곡선을 타기 시작했다.

번역과 관련한 주도 언어의 변천을 보면, EU 집행위의 문서 번역은 1996년에 프랑스어가 38%를 차지했는데, 2007년 현재 12.3%로 감소했다. 반면, 영어는 10년 사이에 46.7%에서 73.5%로 증가했다.

영어는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EU 회원국으로 신규 가입하면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출신 ‘유로크랏’(Eurocrat-European과 bureaucrat의 합성어로 ‘EU공무원’을 지칭한다)들은 프랑스어보다 영어에 훨

씬 능통하기 때문이다. EU집행위에서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근무한 사람에 따르면, 1995년만도 해도 EU 집행위 사무실 서류의 약 70%는 프랑스어로 쓰여졌는데, 이제는 80% 이상이 영어로 작성된다고 한다.

1995년 EU 확대에 이어서 2004년에 EU에 가입한 10개 회원국(발트 3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키프로스, 몰타, 슬로베니아) 출신 유로크랏의 60%는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고 나머지 20%만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하기 때문에, EU 내에서 영어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 참고로 EU 전체 인구 가운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13%이고,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12%다. 흥미로운 것은 독일어의 비중이 18%로 가장 높다. 한편, 외국어로서 영어를 구사하는 비율은 38%나 되지만,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각각 14%이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인 캐서린 애쉬튼이 2009년 12월 외교 안보정책 대표가 되었을 때 프랑스 유로크랏들은 충격을 넘어 경악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캐서린 애쉬튼이 프랑스어를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EU 내 외교 분야의 고위직 인사가 프랑스어를 못한다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나마 EU집행위 바호주 위원장이 프랑스어를 잘한다는 사실에 프랑스 유로크랏들은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한편, EU 회원국 중 교과 과정에서 영어보다 프랑스어를 더 많이 가르치는 유일한 나라는 루마니아인데, 2007년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한 나라가 프랑스였다는 사실은 EU 내 프랑스어의 열세를 의식한 ‘자구책’이었다고 전해진다.

유로비전에서 영어의 부상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Eurovision Song Contest, 이하 유로비전)는 1956년부터 유럽방송연맹(EBU)이 주관해온 유럽 최대의 가요제다. 유로비전의 역대 그랑프리(우승)를 차지한 노래의 언어 변천사를 보아도 유럽의 주도 언어가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옮겨진 사실을 발견

³ 조영진 (2010). “프랑스어, ‘흘러간 옛노래’ 되는가”. 『사자저널』, 1058호.





할 수 있다. 7개국이 참가한 1956년 1회 유로비전 대회에서는 개최국 스위스의 리스 아시아가 프랑스어로 부른 노래 〈르프랭(Refrain)〉이 우승을 차지했다. 1973년 유로비전 대회까지 프랑스어로 부른 노래가 열 번이나 우승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유로비전 초기에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모나코 같은 프랑스어권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1973년 대회부터는 참가국의 자국어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규정이 없어졌는데, 1974년 스웨덴의 아바가 영어로 ‘워털루(Waterloo)’를 부르면서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자국어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가 2001년과 2008년에 프랑스어와 영어를 혼합한 노래로 참가했다. 이를 두고 1977년 마지막 우승한 이후로는 입상을 하지 못한 프랑스의 ‘궁여지책’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팝뮤직에서 영어의 비중을 의식한 ‘국제화’의 방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프랑스어로 부른 노래가 유로비전에서 마지막으로 우승한 것은 1988년이였다. 당시 캐나다 국적의 셀린 디온이 스위스를 대표해 〈느 빠르페 빠 쌍 르와(Ne Partez Pas Sans Moi)〉를 불렀다. 1999년 이래로 유

로비전 우승곡 언어는 2007년 세르비아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어다. 물론 2011년 아제르바이잔의 우승곡도 영어인 ‘Running Scared’였다.

18세기 러시아 궁정에서 조차 사고언어로 풍미했던 프랑스어는 이제 영어에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 검색어로서 영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면서 영어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언어도 도전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 프랑스어의 위세가 수그러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어의 기득권은 여전히 견고하다. 먼저 전 세계 프랑스어권 국가 수는 56개국에 이른다. 프랑스어가 엘리트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코트디부아르 같은 나라들과 프랑스어가 공식어는 아니지만 공교육을 받는 사람이라면 구사할 수 있는 모로코와 레바논 같은 아랍국가들도 있다. ★

조명진 유럽연합 집행이사회 안보전문역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유로존의 재정위기

Japan's Lost Decade and Eurozone Crisis

Some see the current fiscal crisis in the Euro zone as similar to Japan's lost decade in 1990 because similar signs such as Japan's balance sheet recession have appeared in the Euro zone. However, the European Central Bank refuted, through the monthly report May, 2012, that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Euro zone is different in its cause and solution from those of Japan's lost decade. While the real estate bubble and the deleveraging in Japan occurred in the private sector, this does not seem to be an Eurozone wide problem.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wo economies' crises is that each member of the Euro zone has different weakne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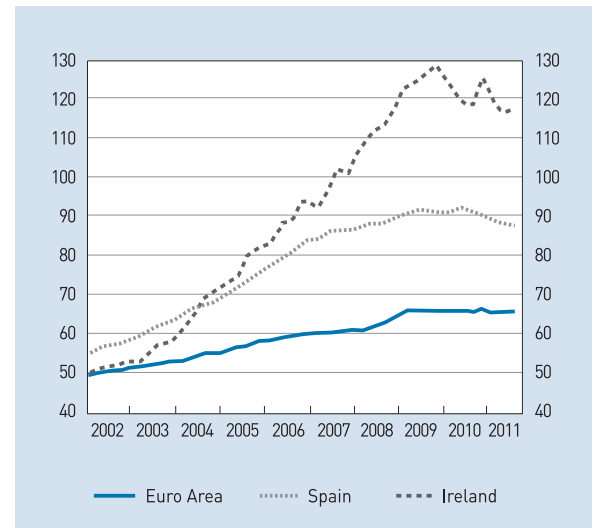
현재 일각에서는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일본이 1990년대에 겪었던 “잃어버린 10년”과 비교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가장 최근 선진국이 겪은 경기침체이자 낮은 경제 성장률과 정부부채의 급격한 증가 등 유로존 위기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선진국의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¹”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유로존에서도 확인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5월 월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유로존의 현재 상황은 원인과 처방이 모두 상이하다고 반론을 펼쳤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와 디레버리징이 민간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진 반면, 유로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전반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현재 유로존 경제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국별로 상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일본의 선례가 유로존 전체의 현상으로 비교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유로존 일부 회원국의 경우, 일본과 같이 경제위기 이후에 민간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디레버리징이 일어났다. 또한 가계부채가 급격히

★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가계부채

(단위: GDP 대비 비중, %)



자료: Euro Stat(ECB(2012, 5)). Comparing the Recent Financial Crisi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 Area with the Experience of Japan in the 1990s(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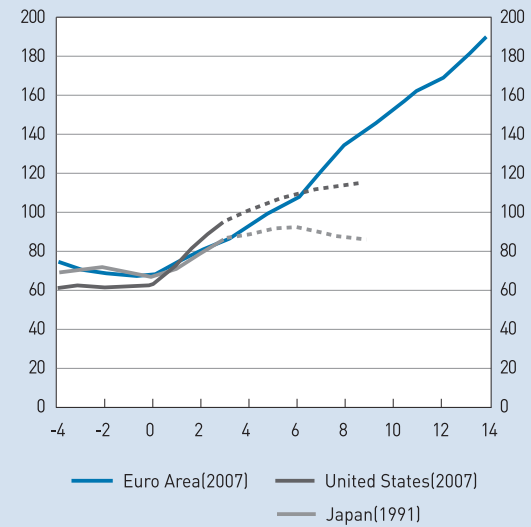
증가하였고, 수면 밑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정부부채의 문제까지 폭발하였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 현상이 두드러진 국가는 스페인과 아일랜드다. 스페인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90%에 달하고, 아일랜드는 이보다 더 많은 130%에 달한다. 유로존 평균이 65%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위험한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양국은 정부부채도 심각하다. 스페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위기 이전인 2007년도 33.4%에

¹ 일본의 1990년대 경기침체를 설명하는 용어 중 하나로, 자산 거품이 붕괴되어 부채가 커지게 되자 유동성 공급을 늘려도 이것이 투자나 다른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민간경제 주체들이 부채를 줄이는 데에만 사용하면서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현상.



★ 위기 전후 정부부채 추이

(단위: GDP 대비 비중, %)



자료: IMF, WEO(2011, 10), ECB(2012, 5), Comparing the Recent Financial Crisi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 Area with the Experience of Japan in the 1990s.에서 재인용)

서 2011년에는 69.6%로 급증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와 다른 것은 유로존의 정부부채는 상당 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프로그램 혹은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로존은 일본보다 초기 위기에 훨씬 더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먼저 유로존은 2007년 위기 징후가 포착된 이후 발 빠르게 정책 금리를 낮추었다. 일본이 금리 조정에 실패해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초래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다.

또한 현재의 정부부채 역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역시 일본의 선례에서 얻은 교훈을 잘 활용하여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지금의 유로존 위기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점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본 보고서의 결론은 두 사례를 단순히 일대일로 비교하여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는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금융 정상화가 위기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유로존의 정부부채가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는 달리 유로존의 위기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하였다.

(자료: ECB(2012, 5), Comparing the Recent Financial Crisi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 Area with the Experience of Japan in the 1990s) ★

정민경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The 3rd EU Survey

The Yonsei-SERI EU center conducted the survey for this year following 2010 and 2011 to raise Korean people's awareness of the EU. From March 1st to the beginning of April,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webpage of both the Yonsei-SERI EU center and SERI and through email. 1,384 memb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first question was to assess the level of interest on the EU. While those who responded, 'I don't know the EU well,' increased by 5.0%p, those who answered, 'I know the EU very well,' and 'I think I know the EU well,' decreased by 1.5%p and 5.2%p respectively. Those who said, 'I will read articles related to the EU,' decreased by 4.6%p. As the negative news related to the European fiscal crisis flooded the media, we can interpret that the interests of Europe were diminished as a result.

The correctly answered rates of the questions that assess the level knowledge about the EU increased a little. The rate of the respondents who knew that EU consists of 27 members increased by 3.3%p, to 29.4%, and that of the respondents who knew that the Euro zone consists of 17 members increased by 4.5%p, to 35.1%.

To the question asking which aspect of the EU was most important, 60% of respondents said 'businesses'. However, compared to this, over 80% of respondents said 'business' last year. Respondents replied that the Korea-EU FTA would not only have economic effects, but also political and cultural impact. Answers that they expected better relations in politics and culture

increased by 12.2%p and 4.5%p, to 23.8% and 11.0%. 77%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Korea-EU FTA affects Korea's business environment.

More than 80%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U.S. is the most important foreign country to Korea. However, only 1.0% of respondents chose the 'EU' and respondents who answered 'China' decreased by 15.1%p, to 16.7%.

However, it seems that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EU is still needed because 27.3% and 38.7% of respondents answered 'very positive' and 'positive' respectively to the question whether they were interested in the EU related information from the EU center.

On the question of the most urgent and necessary research topic, 29.9% of respondents answered 'European fiscal crisis'. Other responses included 'EU integration'(17.9%) and 'EU FTA'(14.6%).

Based on the survey, the EU center plans on providing information to improve Korean people's awareness of the EU and on continuing to do customized activities.





제 3회 EU Survey

연세-SERI EU센터는 EU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2010년과 2011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EU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EU센터 홈페이지와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회원들의 이메일을 통해 3월 1일부터 4월 초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38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먼저 EU에 대한 기본적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는 'EU를 다소 잘 모른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011년에 비해 5.0%p가량 증가하였으며, '상당히 잘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는 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은 각각 1.5%와 5.2% 하락하였다. 또한 '언론에 실린 EU 관련 기사를 읽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답변도 2011년에 비해 소폭(4.6%) 줄어들었다. 이는 2011년과 2012년에 유럽의 재정위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유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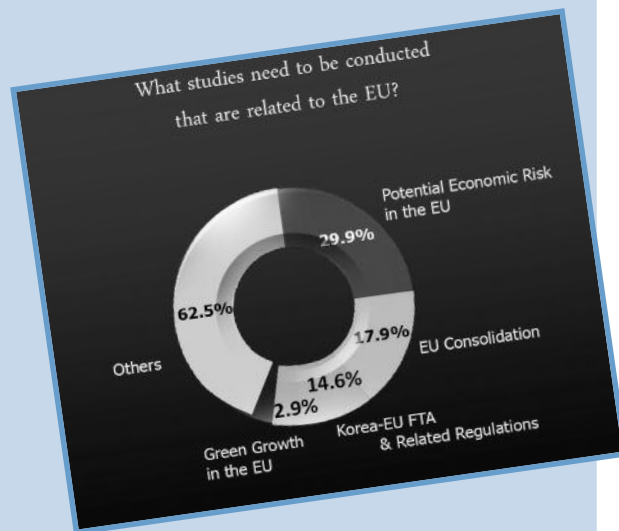
하지만 EU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측정하는 세부 질문에서는 2011년에 비해 정답의 정확도가 다소 높아졌다. EU 회원국이 27개국인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011년보다 3.3% 늘어난 29.4%였으며, 유로존 회원국이 17개국이라고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011년에 비해 4.5% 늘어난 35.1%였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EU가 어떤 분야에서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60% 이상이 비즈니스 관계라고 답했다. 하지만 같은 문항에 대해 2011년에는 80% 이상이 비즈니스 관계를 꼽은 것과 비교해본다면, 한국인들이 한-EU 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한국과 EU의 관계가 경제적 관계를 넘어 정치, 문화적 관계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U와의 정치적 관계를 기대한다는 대답은 2011년에 비해 12.2% 늘어난 23.8%이며, 문화적 관계 확대를 기대한 대답은 2011년 대비 4.5% 늘어난 11.0%를 기록하였다. 한-EU FTA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도 77.3%로 (매우 많이: 7.9%, 많이: 69.4%)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외국 국가를 묻는 질문에는 80%가 넘는 응답자가 미국을 꼽았다. 반면, EU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0%에 그쳤으며, 중국을 꼽은 응답자 역시 2011년에 비해 15.1%가 줄어든 16.7%였다. 하지만 EU센터에서 제공하는 EU 관련 정보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각각 27.3%와 38.7%를 차지해 여전히 많은 응답자가 EU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시급한 EU 관련 연구 주제를 주관식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질문에서는 '유럽 재정 위기'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29.9%를 차지해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이 밖에 EU 통합(17.9%)과 한-EU FTA(14.6%)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EU센터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EU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EU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각계각층에 대한 맞춤형 활동을 올해에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표는 연세-SERI EU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회 EU 특별강연
The 35th EU Special Lecture

On May 16th, 2012, Mr. Maros Sefcovic, Vic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delivered a public lecture at Yonsei University Gwangbok Hall Annex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Mr. Sefcovic began his lecture by recounting his experiences as a Slovak diplomat, representing his nation in its efforts to join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his experiences as a European Commissioner. 'The European Union manages to grab the headlines, mainly because it is the biggest economy in the world. The European Union is responsible and it is very much aware of its impact on the world economy.' said Mr. Sefcovic.

5월 16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EU 집행위 마로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의 강연이 열렸다. 이번 강연에서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은 EU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얻은 교훈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권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유럽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이번 위기를 통해 성장했으며, 앞으로 닥치는 위기에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38회 EU 특별강연
The 38th EU Special Lecture

On May 24th, 2012 there was the 38th special EU lecture in room 115, Daewoo Hall at Yonsei University. The lecturer was Dr. Myung-jin Jo working as senior researcher at the EU Future Strategy Research institute. He delivered a lecture on <Europe and European> based on his new book, <European Pandora, Past, Present, and Future of European Integration>.

Dr. Jo analyzed, in diverse perspectives, his perception of Europe from his 20 years of living in Europe. He mentioned that the competitiveness of Europe comes from the process of integrating differences in cultural and social education. But he also mentioned that even it seems like Europe manages the integrated entity well but it continues to have a problem on racial conflict.

5월 24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학교 대우관 115호에서 제38회 EU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연자인 조명진 박사는 EU집행위 안보책임과 동시에 미래전략연구원 외교전략센터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조명진 박사가 올해 펴낸 『유럽피안 판도라, 유럽 통합의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럽과 유럽인>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하는 자리였다.

조명진 박사는 자신이 20여 년간 유럽에 머물면서 경험한 유럽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경쟁력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교육의 차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EU가 통합된 공동체를 잘 꾸려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스웨덴의 스코네 지역이나 이민자로 인한 인종문제 등의 갈등이 존재하는 양면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9회 EU 특별강연 The 39th EU Special Lecture

On May 26th, 2012, there was the 39th special EU lecture in Secheonyeon Hall at Yonsei University with Tomasz Kozłowski, the EU ambassador to Korea. The topic of the lecture was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EU〉.

The EU is in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Korea, and 9 other countries. This is not a simple economic cooperation but it is a rather complex international political cooperation. Ambassador Kozłowski explained that as Korea becomes stronger, Korea is accepted as an important economic and political partner in Asian.

He mentioned that the economy of the EU is faltering by the crisis in Greece and Spain but it will be resolved by the EU's political solution, not leading to the worst case scenario. He ended his lecture by mentioning that the EU does not think of Greece's withdrawal from the Euro zone as an option, and Greece would stay in the Euro zone as economic impact would be too significant.

5월 26일 토요일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112호에서 토머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 대표부 대사를 모시고 2012년 EU 아카데미 겸 39회 EU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한-EU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으며, 한-EU FTA를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코즐로프스키 대사는 EU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한국을 포함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10개국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력 아닌 국제적 정치 협력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점차 커져가는 국제적 위상과 능력을 인정받아 아시아의 경제·정치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즐로프스키 대사는 비록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제위기로 국제 경제가 흔들리고 있지만 이는 EU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EU는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탈퇴시킬 생각이 없으며, 그리스 역시 탈퇴 시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므로 유로존을 탈퇴하지 않고 현 경제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추측으로 강의를 마무리지었다.



15회 EU Core-Circle 세미나 The 15th EU Core-Circle Seminar

On May 25th, 2012, the 15th EU Core-Circle Seminar was held in the Conference Room 510, at SERI. Jinwoo Choi, prof. of political diplomacy at Hanyang University, gave a lecture regarding 'election in France and the future of Europe'. He discussed about the meaning of Francois Hollande winning the election in France on May 6th, and interpreted how the result of the election would affect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and the solution to the European fiscal crisis. He especially emphasized that Germany and France are two major members in the EU, and they should be analyzed based on the historical relationship of repeated cooperation and competition. He believed that now is an opportunity for the EU to become more robust through the current crisis.

5월 25일 금요일 삼성경제연구소 510호 회의실에서 제 15회 EU Core-Circle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프랑스 대선과 유럽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진우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5월 6일에 있었던 프랑스 대선 결과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후보가 집권당인 사르코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의 의미에서부터 이러한 프랑스 대선 결과가 유럽통합과 현재의 유럽 재정위기 해법에 미치는 영향까지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최진우 교수는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EU의 양두마차는 협력과 경쟁을 반복한 역사적 관계성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EU의 역사는 위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더 강화되었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번 재정위기 역시 유럽통합이 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